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 민원 제목 : 0000 생활지원사 채용 이의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2020. 00. 00. 0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개채용 공고 시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문(00명)을 보고 응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기존생활지원사(00명)를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0명)만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공개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0000은 2020년 사업 기간 종료 전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1년 사업 수행 인력을 기관의 채용절차에 적합하게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 공개모집 과정 중 기존 생활지원사 우선 채용과 관련된 00도 공문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2020. 00. 00. 면접에 적용 기존생활지원사 외에 나머지 0명을 신규 인원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상에는 문제가 없다.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0. 00. 00. 0000(2020-00호 공개채용)의 공고를 보고 접수하여 면접을 보았다.
- 피신청인은 전체응시자 000명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기존생활지원사 00명과 신규 응시자 0명을 채용하였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채용관련 진행사항
 - 2020. 00. 00. : 채용 계획수립
 - 2020. 00. 00. : 채용 관련 00시 채용 계획 보고
 - 2020. 00. 00. : 채용 관련 00시 승인 공문 수령
 - 2020. 00. 00. : 채용 공고문 게시(복지넷, 워크넷, 홈페이지 등)
 - 2020. 00. 00. : 기존생활사 우선 채용 관련 공문 접수

- 2020. 00. 00. : 서류심사 (000명) 합격자 공고
- 2020. 00. 00. : 면접 (000명) 실시
- 2020. 00. 00. : 최종발표 (기존 00 + 신규 0 = 00명)

□ 관계 법령 등

○ 「00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000청 00000과 발송 공문(2020. 00. 0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능 및 건강의 유지,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취지와

효과적 운영 측면을 고려할 때, 수행인력과 어르신 간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장기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사업량 축소 등 합리적 사유가 없을 경우 기존 수행인력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 군 및 수행기관은 수행인력과 어르신 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능 및 건강의 유지,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사업의 취지와 효과적 운영 측면을 고려할 때, 수행인력과 어르신 간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장기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채용공고에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기존 생활지원사의 무조건 우선채용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 기존 생활지원사 재 채용 시는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채용에 반영토록하고
 - 채용 계획 수립을 미리 세워 채용 공고문에 채용 예정인원만 공고하고
 - 채용자격기준에 기존생활지원사(경력자) 우대사항을 표시하여 추후 채용 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의견표명)

- 기존 생활지원사와 실제 신규 채용인원을 구분하여 채용공고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00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향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채용 시 기존생활지원사와 신규채용 인원을 나누어 공고 할 것을 의견 표명 한다.

□ 민원 제목 :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 요청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0000년 00시 00읍 00리 000-0 3층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한 후 0000. 00. 00. 공시지가 확인차 검색하니 대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설정되어 있어 피신청인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확정되어 변경하려면 추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청인 주택 주변으로 사방에 도로가 있는데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신청인도 모르게 잘못 지정된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수정해 달라.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00시 00읍 00리 000-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0-000호선)(이하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라 한다)은 00읍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요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 절차(주민의견 청취 등)를 이행하였으며, 0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장권한사항) 결정 고시를 하였고,
-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이용현황, 필요성, 예산 등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할 사항이다.

□ 사실관계

-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민원 토지(대지 000m²)는, 신청인이 0000년에 매입하여 0000년 0원 이상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한 3층 주택(건축면적 00m², 연면적 00m²)이다.
-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토지에 3층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0000. 00. 00. 공시지가 확인 차 검색하니 대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설정되어 있어 피신청인 0000과에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주민공람공고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이 제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설 17개소 중 1건(용도지역상향)만 의견제시]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00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였다.
 - 신문 공고(00일보, 00일보, 0000신문 : 0000. 00. 00.)
 - 게시판 공고(시청, 출장소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0000. 00. 00.) - 별도 의견없음
 -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공고, 0000. 00. 00.)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는 폭00m, 연장 000m이고, 개설사유는 기존 취락내 소방도로 확보 및 도시가스 설치 등을 고려하여 노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0000년 이후 사업대상으로 0000년 사업시행 대상이며 사업비는 0,000백만원이고 0000년 사업실효 대상으로 되어 있다.

- 0000. 0. 0. 담당 읍부즈만이 00리 이장과 통화에서 통장이 소방도로의 필요성이 있어 00읍에 건의를 하여 00읍이 피신청인에게 건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고, 소로 0-000호선은 3층 건물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0000. 0. 00. 00리 이장과 면담에서 이장은 00리 000-0 토지주가 현재 공고된 노선에 반대함에 따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00리 000번지 옆 쪽의 도로에서 000번지 옆 도로를 확장하는 안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00읍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관계 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신문과 시청, 출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판단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의 노선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및 시 조례에 근거하여 신문 공고 및 게시판·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공고만 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사를 적극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신문 공고 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00시·00시와 등기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는

00시·00시 등 인근지자체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방안이 미흡한 점,

- 「00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2항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 인근주민들 및 00리 이장,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는 이해관계인이 10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 00읍 00리 이장이 00읍장에게 제출한 주민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하고, 피신청인이 하반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검토 시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 노선 결정과 관련하여 신문 공고 및 게시판·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실은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00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재확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의견표명)

-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노선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00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1. 피신청인에게, 00시 00읍 00리 소로0-000호선 도시계획도로 노선 지정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확정할 것으로 의견표명 한다.
2. 피신청인에게, 향후 주민의견 수렴 시에는 신문공고 및 열람 등에 추가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서신 발송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